

1. IMF 시대는 왜 왔는가?

가. 최근의 우리나라 경제상황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심각하게 노출됨에 따라 국제금융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 중에서도 대규모 부실채권 등으로 금융부문이 취약하고 기업이 과다하게 차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러한 우리경제의 위험이 단기간내에 해소될 전망이 희박하다고 전망한 외국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회

특 별 기 고

IMF시대의 축산업 대응방안



김 정 주
(건국대 자연과학대학장)

수하기 시작하였고 그것도 투자자금을 일시에 회수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심각한 외환부족사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대외신뢰도를 높이고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나 노력을 일찍부터 서둘러야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대선 영향등 정치적 논리를 내세워 미루어 오다가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우리의 자구노력으로는 외환수급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결국 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나. IMF 자금지원 요청과 협의 경과

우리나라는 외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 21일 IMF에 유동성(통화)조절자금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고, 이후 금융기관 부실현황 파악 및 정리방안은 물론 거시, 재정, 대외거래등 우리경제 전반에 대하여 IMF측과 실무 협의가 이루어졌다. 1997년 12월 3일 IMF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IMF총재와 협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져 외화 유동성(통화)부족 문제는 일단 해결되었으나 그 후 파생되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 돈만 빌려주면 될일이지 웬간섭이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IMF 자금이 단순한 상업용 자금이 아니라 그 자금의 용도와 효과를 관리하는 지도금융이기 때문이다. 마치 농가에게 농사자금을 대출해주고 농협이 그 자금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도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아시아의 용(龍)이니,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느니하는 칭송을 받던 한국이, 국민소득 1만불대를 가장 짧은 기간에 달성했다고 세계경제개발 성공사례가 되었던 한국이, 세계 부자나라 사교클럽에 해당되는 OECD에 주저없이 가입했던 한국이 어쩌다 이지경까지, 그것도 순식간에 오게 되었는가?

기업은 기술개발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정치권과 손잡을 궁리만 했으니 상품의 질은 떨어져 수출은 감소되고 값비싼 외제품 사다 팔기에 혈안이 되었으니 외환이 바닥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었다. 이러한 기업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외국투자자들은 한국의 경제위기를 예상했고 하나 둘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여행자유화의 물결에 따라 관광수지가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고 외국유학이 국내에서 학교를 보내는 것 보다 더 싸게 먹히는 기막힌 현실이 지속되어 무역외 적자는 쌓일 수

〈표1〉 IMF와의 합의내용

거시경제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률 : 98년 3% 이내, 99년 잠재성장률 수준 회복 ○ 물가상승률 : 98년 5% 이내 ○ 경상수지적자 : 98년, 99년에 GDP의 1% 이내 유지
통화, 재정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긴축 운용 ○ 균형재정 또는 약간의 흑자재정
금융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개혁법안 연내 처리 - 한은독립성 보장, 통합금융감독기구 설립 등 ○ 금융부분 구조조정
기업지배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의 투명성 제고 ○ 기업구제를 위한 보조금지급, 세제지원 불가 ○ 기업의 부채비율 축소 ○ 상호채무보증제도 개선
자본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의 단계적 추가 개방 조기 실시 ○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분야 추가 허용
무역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선 다변화제도 폐지 ○ 수입형식승인제 투명성 제고
노동시장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고용보험제도 강화
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보유액, 선물환거래, 금융기관부실채권 등의 정보공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경영 및 대출결정에 대한 정부개입 금지 ○ 농업,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유지하되, 손실은 예산에서 부담 ○ 금융실명제의 기본골격 유지

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외환보유가 바닥이 보여도 “문제 없다”고 계속 거짓말을 해댄 경제 관련자들의 뱃장(?)도 이번 경제위기를 부르는 데 한 몫을 했다. 요컨대 오늘의 위기상황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해묵은 정경유착, 정치 지도층의 독선, 총론에는 합의하고 각론에서는 반대하는 산업의 구조조정,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의 무분별한 외화낭비 등의 원인이 싸이고 싸여 일찍부터 예고된 수순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다. IMF와의 합의 내용

IMF의 구제금융 차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우리나라는 빚진자로서 IMF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자금지원과 관련한 합의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98년 경제성장률은 3% 이내로 낮추고, 금융 및 재정에 긴축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기업구제를 위한 지원은 중단된다. 자본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수입 다변화제를 폐지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외환 보유액, 금융기관 부실채권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2. IMF시대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가. 경제성장이 멈추고 실업자가 늘어난다.

IMF 프로그램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98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이내로 크게 둔화되어 실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97년의 경제성장률은 6.0%가 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금년의 절반 수준이 될 것이다. 경제 성장률이 1% 하락함에 따라 실업자가 10만명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소한

30만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생겨날 것이다. 반면, 경상수지는 적자 규모를 97년의 135억\$에서 98년과 99년에는 각각 43억\$, 21억\$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므로 불요불급하지 않은 공무 해외여행, 물품의 수입은 일체 중단될 것이다.

나. 물가가 상승한다.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환율급등으로 앞으로 당분간 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996년 12월에 미화 1달러당 교환비율은 844원이었던 것이 1년이 지난 97년 12월 15일 현재로 1600원으로 두배가 났 것이다. 이는 시차를 두고 국내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통화긴축 정책에 따른 금리 상승과 재정긴축 정책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등도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98년 물가를 5% 이내에서 억제할 방침을 세워두고 있으나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스럽다. 따라서 경기는 침체되어 실업자는 늘어나면서도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될 전망이다. 원래는 물가가 오르면 실업자가 줄어들어야 정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품목별 물가관리대책을 한층 강화할 것이고 환율 상승 등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을 기업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토록 하려는 정부의 요구가 강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다. 재정 및 금융정책이 초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

경기가 침체되면 자연히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이고 정부가 금융부분 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부담이 늘어나 재정적자 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정부는 '98년도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약 7조원의 세입 증대 및 세출 삭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의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면제대상은 축소할 것이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등을 인상하려 들 것이다. 또한, 경상지출을 삭감하고 민간기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것이며 우선 순위가 낮은 자본지출도 삭감하려 들 것이다.

대규모로 공급된 유동성 통화량을 환수하고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흡수하기 위해 초긴축 통화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실제로 통화증가율을 13% 수준으로 억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가 상승하여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현재 14-16% 수준인 시장금리가 18-20%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금융시장이 대폭 개편 될 것이다.

부실금융기관은 인수 합병되거나 폐쇄되어 금융시장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이다. 자본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외국자본의 유입이 늘어나고, 선진금융기법을 가진 외국 금융기관들의 국내진출이 확대될 것이다.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97년말까지 50%, '98년말까지 55%로 확대하고 외국인의 국내 단기금융상품 매입을 제한없이 허용하고, 국내 회사채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없이 허용하며, 외국인의 국내은행 지분 소유를 51%까지 허용하도록 되어있다. 외국인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 확대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경기는 침체되어
실업자는 늘어나면서도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
션이 심화될 전망이다. 원래는
물가가 오르면 실업자가 줄어들어
야 정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품목별 물가관
리대책을 한층 강화할 것이고 환율
상승 등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을
기업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토록 하려는 정
부의 요구가 강하게 작
용될 전망이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단기자금의 대량 유입
될 경우 경제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3. IMF시대가 우리나라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 농업경영비가 증가할 것이다.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비료, 농약, 사료, 유류 등의 영농자재 가격이 환율상승 영향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96년 주요 영농자재의 수입의존도를 보면 비료의 경우 51.8%, 농약 46.0%, 사료 69.3%, 유류 100%등이며 같은 해 농가호당 농업경영비의 비목별 비중은 비료 5.8%, 농약 6.0%, 농기계비 14.2%, 사료 22.0%, 노임 7.6%, 임차료 19.4%이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유류는 환율인상분이 그대로 원가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농업경영비에서 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시설재배 농가의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996년에 농업경영비 중에서 광열, 동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축성오이는 34.5%, 방울토마토는 36.0%, 장미는 32.3%등이다. 사료는 원료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인상으로 원가상승 요인이 크고, 특히 엘리뇨 현상의 영향으로 주요 생산국의 작황도 부진하여 가격인상폭이 다른 자재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 '87년 엘리뇨 발생시 사료 원료인 옥수수 국제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인해 '88년에 무려 45.9% 상승한 사례가 있다.

농기계의 경우 수입부품에의 의존도가 높은



대형농기계의 가격 인상과 이들 부품의 공급 차질이 예상된다. 주요 농기계 부품의 수입의존율은 트랙터(50마력급 이상의 경우)는 50%, 콤팩트인(4조 산물형)은 30%이다.

나. 농산물 수요, 특히 축산물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재정 및 금융 긴축과 경제성장률 둔화로 경제불황이 심화되면 도시가구의 소득이 감소하여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큰 농산물, 예컨대 과일, 시설채소, 화훼, 축산물등 고급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시가구의 외식비 지출이 줄어들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값에 불구하고 양질의 상품을 찾는 소비 행위는 없어지고 생활의 내핍화가 이루어져 국내산 농산물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외국농산물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 농가소득이 대폭 감소될 것이다.

농산물 수요 감소와 이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농업조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농업경영비는 증가하여 농업소득은 대폭 감소할 것이다.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농업자금의 대출금리가 인상될 경우 농가의 차입금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농가 소득 감소는 더욱 크게 될 것이다.

기업경영여건의 악화로 농촌지역의 중소기업이 조업을 단축하거나 도산하게 되면 농업인의 농외취업 기회가 축소되어 농외소득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경제불황으로 도시가계의 소득이 떨어지면 도시가족이 농촌에 보내는 송금보조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규모별 영향을 보면, 대규모 농가와 자본투자가 많은 농업부분은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수익률은 더욱 낮아져 농업소득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영세 소농은 농외소득의 감소로 농가경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 농업 구조개선을 위한 정부의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정부가 재정긴축 기조를 유지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 사회간접자본사업, 농업 구조개선사업, 교육투자사업 등에 대한 예산삭감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예산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제2단계 구조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1998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회 및 농민단체 요구로 당초 정부안보다 추가되거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 우선적인 삭감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비료계정적자 원금 상환분, 영농·영어·양축자금, 경지정리·용수개발·기계화경작로 확장 및 포장자금, R.P.C 설치 지원자금, 농어민후계자·전업농 지원자금, 조합경영개선자금 등이 그것이다.

마. 농산물 수입개방압력이 증대될 것이다.

정부는 5%로 책정된 물가상승률 목표를 지키기 위해 농산물가격 억제 정책을 펼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물량을 확대하고 관세를 인하하라는 요구가 커질 것이다. 대외적으로도 IMF의 주도국인 미국 등으로부터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4. 우리나라 농업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가. 생산비 절감만이 살길이다.

배합사료 업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고회환시대 모든 수입원료가 비싸지는 판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농용자재를 많이 쓰는 부분일수록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사료곡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배합사료가격은 이미 10%가 인상되었다. 배합사료 생산업체들은 환율이 올라 불가피하다고 하나 납득하기 어렵다. 배합사료 시장구조를 개편하면 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환율인상 영향을 흡수할 수 있다. 품질개선에 몰두해야할 고급인력을 세일즈맨으로 내몰리는 과다경쟁을 모든 사료업계가 중지하면 환율인상요인을 사료값에 전가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농촌임금을 낮추어야 한다.

지금부터 10년전인 1987년 소비자 물가지수가 60.2이고, 지난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10.1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 10년간 소비자 물가는 1.83배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농촌노임은(남자)

앞으로 어떤 돌
발변수가 생겨날지 예
측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 나설 수
있으면 몰라도 어차피 이 어려
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
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패배주의는 그 어
떤 악조건보다 나쁜 것
이다.

10,568원에서 39,019원으로 3.69배로 증가한 셈인데 이는 소비자 가격보다 농촌노임이 2배이상 증가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임금인상은 노동자의 기회비용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즉, 다른 데 취업기회가 많아질수록 농촌노임은 상승하기 마련이다. 이제 IMF시대를 맞아 이러한 고임금은 거품을 빼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소위 말하는 3D현상이 아직도 남아있다. 즉, 구조적 실업문제에서 오는 농촌 노동력 부족현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가 남아 있다. 이를 위하여 도시의 남아도는 인력을 농업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농업 경영형태를 가족경영형태로 유지시킴으로서 인건비 절감이 필요하다.

다. 농업의 경영구조를 점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중래의 단독경영형태는 모든 경영 이득이 경영자에게 귀속되지만 동시에 모든 위험도 경영자에 돌아오기 때문에 경영능력이 부족하여 경쟁이 치열한 시장여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생산자재의 조달, 생산물의 생산, 생산물의 유통 및 소비를 연결하는 계열화체제(Integration)도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소비자 가격을 낮추어 수요를 창출하고 농업생산에 수반되는 위험을 분산시키며 농업경영자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계열화 사업에서 야기되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노력도 선행되어야 한다.

5. 양돈업계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아무리 IMF 시대가 도래해도 양돈업계가 살길은 그래도 생산비를 낮추고 품질은 높이며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길밖에 방법이 없다. 구입 배합사료 위주 사양에서 벗어나 음식물 쓰레기 등 부존 사료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사료로 일부 대

체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고용 인력에 의존하던 경영체제에서 가족경영체제로 전환하여 가족노동을 최대한 활용하고 구석구석 낭비요소를 제거해야한다. 그야말로 “짠돌이”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투기성 입식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종전처럼 돼지 가격 상승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양돈 시설에 대한 신규투자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아무리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시설자금이 조달된다 하더라도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대출금리가 오르지 않을 수 없고 불황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불황시기에 새로운 투자는 생산비 상승만 부채질 할 것이다. 돼지고기 품질과 위생수준은 항상 최고를 유지해야 한다. 소비자가 외면하면 그나마 살길이 막힐 것이기 때문이다. 가격 및 시장 정보에 더욱 신경을 써 수취가격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줄여야 한다. 유능한 “농사꾼”이기 되기 위해서는 유능한 “장사꾼”이 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6. 맺는말

한국의 경제는 지금 사상 최악의 상태에 와 있다. 그것은 한국농업의 환경이 최악의 상태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앞으로 어떤 돌발변수가 생겨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 나설 수 있으면 몰라도 어차피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패배주의는 그 어떤 악조건보다 나쁜 것이다. **養豚**

